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렴

01

법률 적용 대상

▶ 적용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등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 교육부 소관 : 국립대학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26개 기관
-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사

▶ 적용 대상자

- 공직자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 (적용) 교원-초·중등 기간제교사, 직원-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자(예시 :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코치, 급식보조 등)
- (제외) 대학의 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 초·중등 학교의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 공직자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각종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자
- 일반국민(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

▶ 질의·응답(Q&A)

- (질의1) 학교법인의 비상임 이사도 법 적용대상인지?
- (답변) 임원은 이사 및 감사(상임 및 비상임 포함)를 의미하므로, 비상임 이사도 법인의 임원으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됨
- (질의2)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가 법 적용대상인지?
- (답변) 행정기관 종사자의 경우 공무원 및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만 법 적용대상자임.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는 법 적용대상 제외. 단, 행정기관의 학교·학교법인 등 기관의 경우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는 법 적용대상임

02

부정청탁의 금지

▶ 부정청탁 :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한 법령 위반 및 지위·권한 남용 행위

- 인·허가 등 업무 처리 행위
-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행위
-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행위
-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 개입 행위
-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개입 행위
-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행위
-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개입 행위
-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 개입 행위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행위
-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행위
-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행위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 행정지도·감사 등 결과 조작, 위법사항 묵인 행위
- 사건의 수사·재판 등 개입 행위
- 위 14가지의 대상 업무에 대한 지위·권한 남용 행위

▶ 제재기준

- 과태료 대상
 -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1천만원 이하)
 -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일반인 2천만원 이하, 공직자등 3천만원 이하)
- 형사처벌 대상
 - 부정청탁 직무수행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징계 대상은 될 수 있고,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형사처벌 대상임

MINISTRY OF EDUCATION

▶ 예외사유

-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행위 요구
- 공개적으로 특정행위 요구
-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 법정기한 내 업무처리 요구 등
- 직무·법률관계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신고방법

- 최초 부정청탁 : 명확한 거절의사 표시
- 2회(동일) 부정청탁 :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 신고 (신고 ⇨ 면책, 미신고 ⇨ 징계 대상)
- ※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도 가능

▶ 질의·응답(Q&A)

- (질의1) 부정청탁 관련 징계 대상자의 범위?
- (답변) 부정청탁자, 부정청탁 직무수행사, 부정청탁 2회 접수 시 미신고자는 징계 대상임
- (질의2) 부정청탁 미실현 시 제재대상 여부?
- (답변) 부정청탁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청탁자는 과태료 부과 및 징계 대상
- (질의3) 동일한 부정청탁이란?
- (답변) 청탁자가 동일인인지 여부가 아니라 청탁내용이 동일한 것을 의미함
- (질의4) 상급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 공직자등에게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한 경우 하급 공직자등은 처벌받나요?
- (답변) 지시한 상급 공직자등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고, 하급 공직자등은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따른 것임을 안 경우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임

03

금품등 수수의 금지

▶ 금품등 : 금전·숙박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 접대·향응,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제재기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 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직무 관련이 있는 경우

- (원칙)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시 과태료 대상 (수수금액의 2~5배 이하)
-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 시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 성립

(예외)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내의 **음식물(3만원)·선물(5만원)·경조사비(10만원)**
-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이 제공하는 금품등
- 직원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등,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불특정 다수용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
-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

직무 관련이 없는 경우

-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는 법 적용대상 아님 (직무 관련이 없는 친구 등 지인으로부터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가능)
-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제재
- ※ 청탁금지법상 직무란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
- 법령상 관장사무,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포함
- ※ 동일인은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될 수 있음

▶ 신고방법

- 직접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 시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 신고 (지체없이 신고 시 면책, 지체하여 신고 시 징계 감면, 미신고 시 징계)
-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 신고
- ※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도 가능

▶ 질의·응답(Q&A)

- (질의1) 직무와 관련된 교직원등이 승진한 경우 10만원 상당의 난 선물 가능한지?
- (답변) 경조사는 결혼·장례의 경우에 한정되며, 승진의 경우 경조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만 수수 가능
- (질의2) 업무협조가 필요한 기관 방문 시 가벼운 음료수 제공이 가능한지?
- (답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어 허용됨
- (질의3) 골프접대의 경우도 선물로 인정되어 가액기준 내라면 수수가 가능한지?
- (답변) 편의제공에 해당하는 골프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어 가액기준(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음

(질의4) 고등학교 동문회에서 졸업 30주년 기념행사에 모교 교장을 초청하여 모교교장을 포함한 참석자 모두에게 1인당 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경우 법 위반인지?

(답변) 졸업생들의 모임인 동문회와 모교 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5) 학부모회 간부 등이 운동회 등에서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했을 경우 법 위반인지?

(답변)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음

(질의6) 석·박사 논문심사 시 학생이 교수에게 제공하는 여비, 숙박비, 식비의 경우도 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답변) 논문심사를 받는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질의7) 1인당 식사비가 5만원인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2만원은 공직자들이 부담한 경우 법 위반인지?

(답변)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직자들이 지불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8) 국회업무 중앙부처 사무관이 원활한 국회 활동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보좌관들과 정기적인 저녁모임을 가지면서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한 경우 법 위반인지?

(답변) 사적으로 갖는 정기적인 저녁모임을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1인당 3만원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

(질의9) 중앙부처에서 국정감사 기간 중 소관 상위원회 소속 보좌관 등에게 3만원 이하 식사를 제공한 경우 법 적용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답변) 국정감사 기간 중의 식사 제공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10)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시행령 제17조 별표 1의 가액범위 내의 경우라면 직무관련성·대가성 유무에 관계없이 수수해도 되는지?

(답변) 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형법상 뇌물죄로 형사처벌됨

04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적용대상** : 공직자 등(공무수행사인은 적용대상이 아님)

▶ **외부강의등** : 직무와 관련, 직위·직책에 의한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토론회·공청회, 회의 등에서 강의 등

▶ **신고대상** : 대가 수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외부강의 등은 신고대상이며,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요청한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대상 제외

▶ **신고방법** : 사전신고,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신고
※ 교육부의 경우 차세대 e사람 → 복무 → 근무상황 → 외부 강의·회의등의 신고 및 변경을 통해 신고(기관별 시스템에 따라 운영)

▶ **초과 사례금** : (신고자) 2일 이내 신고(액수, 반환 여부) → (접수 기관) 7일 이내 신고자에게 통지 → (통지받은 신고자) 반환 사실 기관에 통지

▶ **제재기준**

– 과태료 대상

- 초과사례금을 수수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1시간, 1건당)〉

대상자	사례금 상한액	
	구분	금액(만원)
공무원	장관급이상	50
	차관급	40
	4급이상	30
	5급이하	20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 1시간 초과외의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함	
	• 외부강의등 : 1시간당 1백만원	
	구분	금액(만원)
	기관장	40
유관단체 임직원	임원	30
	그 외 직원	20
	※ 1시간 초과외의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함	

▶ **질의·응답(Q&A)**

(질의1) 사전 신고없이 외부강의등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답변)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님. 다만, 사전신고 의무 불이행 시 법 제10조제2항 위반으로 징계 등 행정처분 대상임

(질의2) 근무시간외 외부강의등도 신고 대상인지?

(답변) 근무시간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대상임

(질의3) 직무관련이 없는 외부강의등도 신고 대상인지?

(답변) 직무관련 없는 외부강의등은 신고 대상이 아님. 이 경우 출장이 아닌 연가를 활용하여야 함

(질의4) 법령상 시험 출제위원 참여가 외부강의등에 해당 되는지?

(답변) 법 제8조제3항제3호 또는 제8호에 따라 정당한 권원 또는 사회상규상 허용되어 신고 대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5) 외국대학 등 외국기관에서 실시한 외부강의등도 사례금 상한액 기준을 적용받는지?

(답변) 적용받지 않음

05 공무수행 사인

▶ **대상**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자
-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등과 개인
-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된 자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적용범위** :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만 적용

▶ **질의·응답(Q&A)**

(질의1)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답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만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하고,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경우 그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2)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을 적용 받는지?

(답변) 외부강의등 수수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질의3) 공무수행사인이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이 100만원 초과 금품등을 받아도 되는지?

(답변) 공무수행 사인은 공무수행과 관련된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 수수 금지지만 법 적용됨

06 기타

▶ **신고자 보호·대상**

- 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및 금전적 보상

신고자 보호장치

불이익조치 금지, 신고자 신변 보호, 신고자 비밀보장, 신고자 책임감면

신고자 보상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 손실방지,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 ➡ 포상금 지급가능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 증대,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 ➡ 신고자의 신청 ➡ 보상금 지급

▶ **기타 벌칙**

위반행위	제재수준
– 신고자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 위반행위의 신고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신고등을 이유로 파면·해임·해고 등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 –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 신고등을 이유로 징계, 전보, 임금 차별, 감사 등 불이익 조치를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보호조치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징계 등 가능